

96/5/10

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대표전화: 796-8364, Fax: 793-4745, Hitel/Pc-ServcID: SOPA2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귀하
발 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 용 :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 보도 자료

1. 바른 언론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3일 서울시에서는 기존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의 지속적 확충,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영제 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의 4가지 기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 보육시설운영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서울시 개선계획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육사업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개선안은 그 발표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학계와 시설 종사자 및 시의원의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서울시 개선안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보육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 서울시 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인 공공보육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각 분야의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다
음

서울시 보육정책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95. 5. 10 (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 태화 복지관 (734-4772)
(전철 이용시 종각역에서 안국동 방향)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曹興植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표 : 崔 浩 서울시의회 보건사회분과위원장
金宗海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李昌美 곡교어린이집 원장
(서울시 국공립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교육분과 위원장)
- 朴貞惠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
- 南仁順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학부모 대표)

1995년 5월 10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 오재식 · 홍성우

< 발제문 요지 >

1. 서울시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영보련)의 발제문 요지

○ 서울시 개선안에 대한 평가

- 1) 보육시설 확충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보육요구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2) 구립시설 '사유화 경향'이라는 문제는 '직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의 운영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 3) 보육시설이 영아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안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다.
- 4)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오후 4시 이후 비상근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보육의 안전성과 보육의 질을 고려할 때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 5) 위탁 운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평가방법과는 명백히 달라져야 할 것이며,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이처럼 서울시 개선안은 현재의 보육사업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에 관한 철학과 전문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보육사업의 질을 하향 시킬 요인들이 많고, 보육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의 부재로 말미암아 보육현 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 영보련의 대안

- 1) 보육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해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육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 2)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일정하게 설정하고, 위탁결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과정까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영아 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수요에 따른 시간제 운영에 관해 시설장이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4) 1일 근무체제 하루 2시간 보육연구 및 준비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과 주4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한다 (비상근교사 배치에 반대한다).
- 5)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 6) 보육정보센타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 (1) 보육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선정,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의 선정, 설계, 건축,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등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위원회가 보육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 즉 보육사업 행정 전문가, 어린이집 운영자, 건축가, 관련 교수, 시민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 보육정보센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지도,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이용의 알선,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2.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민보련)의 발제문 요지

○ 서울시 개선안의 문제점

- 1) 이처럼 중요한 시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학계는 물론 시설종사자 및 시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 2) 개선안과 지원의 내용이 전체 보육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민보련의 의견

- 1) 위탁 선정은 선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민간에게도 확대하여야 한다.
- 2) 보육사업의 관점은 아동에게 맞추어야 한다.
 - (1) 개선안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민간시설에서 실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2) 아동에게 보육사업의 관점을 맞춘다면, 민간과 국공립의 차별의 폭을 줄여야 한다.
 - (3) 지원액은 시설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공립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지급됨).
 - (4) 민간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보육정보센타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6)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 용자를 실시하는 것이 실제로는 보육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냥고 있다. 따라서 보육사업 종사 경험이 있는 자에게 용자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발제문 요지

1) 보육시설 운영개선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 보육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구립시설의 운영을 직영화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의지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직영화하더라도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이 많다. 즉 현재의 문제점들을 '직영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 직영화하면 지원되는 예산들이 왜 현재는 지원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2) 개선안 계획과정에 관하여

- 이번 개선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의문이다. 즉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였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3) 사회적 육아, 공공보육의 개념이 미약하다.

- 서울시 개선안에서는 보육을 사회적인 공공보육으로 보는 개념이 미약하다.
- 공공보육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선안은 구립시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공공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공동부담하는 공동부담의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